

 <p>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h1>보도자료</h1> <p>(2019. 5. 15 수)</p>	 <p>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p>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p>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11 경제」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경제’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과 다빈치알앤씨 연구팀(최창욱 연구본부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을 기준으로 경제 분야에서 발생할 주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소득수준과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인공지능기술 확산, 암호화폐 유통, 세계화 진전, 경제성장 속도, 소득격차 수준 등을 미래 동인으로 설정하고 경제 분야에 대한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경제 부문에 대한 종합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혁신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원은 기후·환경, 인구·사회 등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경제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화
(02-2224-9807, lsh@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경제(Economy)’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과 다빈치알앤씨 연구팀(최창욱 연구본부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제의 장기미래를 추동하는 핵심 동인으로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암호화폐의 유통, 세계화의 진전, 경제성장 속도, 소득격차 수준 등으로 설정하고 미래예측의 방법론인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을 동원해 각 주요 동인의 극점과 동인들 간의 복합적 관계 및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2050년경 경제분야에서 발생할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제분야 종합시나리오는 동인간 결합 시나리오의 재조합을 통해 혁신형, 파국형, 연장형, 현상고착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의 예측 미래 중 한국 경제가 당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연장형’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장형’은 5개 동인이 현 추세에서 근본적 변화 없이 앞으로도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으로, 세계화 진전, AI 기술발전 속도, 암호화폐 유통 범위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진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근본적 대책 없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혁신형’ 시나리오는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신기술 확산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을 적시에 관리해 나가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말한다. 기술진보와 경제적 성과(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격차 해소가 동시에 달성되는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묘사되는 시나리오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파국형’이다. ‘파국형’은 기술진보에 대한 수용도도 낮으면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기술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1인당 소득성장도 정체된 데다가 소득격차마저도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상 고착형은 기술진

보의 실패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해 1인당 소득성장이 정체되지만, 그래도 소득격차는 낮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높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연장형’에서 가장 선호되는 ‘혁신형’으로 경제의 경로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경제의 주요 동인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경제의 생산성과 역동성 회복에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정부 본연의 기능 중에서는 기존의 관치에 의한 자원배분 시스템을 탈피해서, 새로운 인적 자원 교육 시스템 개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유지, 사회적 갈등의 중재 등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부문에서는 현재의 취약계층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분류돼온 지식·숙련 노동자까지 포함한 복지제도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혁신형 시나리오로의 전환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등 특정 한 분야에서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제안하는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원은 기후·환경, 인구·사회 등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경제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화

(02-2224-9807, lsh@nafi.re.kr)